"광주 R&D 특구 특단의 지원책 필요"

지역 경제인들 건의 봇물…최경환 장관 "광·부품산업 등 세종시 영향 없을 것"

광주 '국정설명회'는 세종시 일방 홍보만 하고 끝내

19일 '지방공무원 국정설명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역 경제인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 인사들은 이날 오전 첨단지구 광주기술협력교류센터에서 열린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로 인해 지역 내 첨단산업 발전이나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조속한 R&D 특구 지정, 대덕특구와 차별화된 광주 R&D 특구 지원, 태양광 연구소 설립, 아시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광주 R&D 특구 지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지역 내에서 기대도 높다"며 "하지만 최근 세종시 문제로 지역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2월 중 특구지정이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남대 장병완 총장 역시 "광주 R&D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영복 산학연협의회 회장은 "세종시로 인해 광주 R&D 특구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따라서 세종시와 버금가는 기반조성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에대해 "광주 R&D 특구는 대구와 분리해 조만간 결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광주의 R&D 특구는 기업과 연결돼 있는 산업용 특구로, 대덕단지나 세종시의 기초과학 R&D 특구와는 전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태양광 및 풍력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혁신도시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광주시민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광주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光)·신재생에너지·부품산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광주행을 보고 드렸더니 '광주 광산업 발전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또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다른 지역이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전력까지 지역으로 내려오면 관련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국정설명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로 일관, 참석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특정 사안을 홍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대규모 국정설명회를 개최했으면서도, 막상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전남에 미치는 악영향을 궁금해 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우려는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정설명회'는 전체 90분의 진행시간 가운데 50여 분을 세종시 수정안 설명에 할애했다. 나머지 시간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참석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경제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 현안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국정설명회'가 1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4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대부분의 시간이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할애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도시 자족 용지 늘리고 가격 추가 인하

국토부 세종시 피해 최소화 대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 전국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가 확대되고, 용지가격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혁신·기업도시는 부지면적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50만㎡ 이하의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이용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100만㎡를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해 원형지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원형지 공급이 늘어 기업 유치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지원단은 예상했다.

지원단은 또 혁신도시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지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전인 무안, 영암·해남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희망하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혁신도시와, 토지공급 자체가 원형지 개발 방식인 기업도시에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기업도시는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 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대규모 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 특별법에는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작성해 세종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공사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기갑 판결 사회에 부정적 영향"

法-檢 갈등 확산속 변협 이례적 판결 비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강 의원에 대한 판결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가 사실상 검찰의 편에 서게 되면서 최근의 갈등 상황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한 사안이나 시국 사건을 중심으로 성명을 낸 경우는 있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대한변협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마저 부적절하다고 지적,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번 갈등의 한쪽 당사자인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협이 이번 성명은 그간 법원과 검찰 간에 머물러온 갈등구도를 법조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변협의 성명에 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들도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이미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변협 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에 성명의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정교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단체가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성토하는 상황이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업인데 진행 중인 재판을 재단하는 성명을 낸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선가도' 다지기?

무리수 우려 불구 세종시 수정 반대 '사생결단'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모습은 기존의 정치적 행보와는 다르다.

예전에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한마디 발언 후 잠적하다시피 하며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기 서린 표정으로 매일 여권 핵심부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타협도 거부한 채 마치 승부수를 던진듯한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이런 박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적 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박 전 대표의 행보를 대권을 향한 첫 걸음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국민에 심어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대선 지형을 서서히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약속을 깬다면 한나라당이 선거 때 아무것도 호소할 수 없다. 표를 못 얻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친박 의원도 "박 전 대표가 원안고수에서 물러서면 정치적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말을 뒤집는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것도 역시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3~6개 부처를 옮겨가는 절충안으로 타협하면 당장 당내는 조용해질 수 있겠지만, 차기 대선에서 '원안고수' 공약이 야권에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박 의원은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약하고 나오면 충청표가 야당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친박 내에서 수정론, 절충론, 본회의 무기명자유투표론 등 이견이 나올 때마다 박 전 대표가 직접 반박하는 것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대전'에서 내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